

[서식 예]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(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소외 ◆◆◆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○○. ○○. ○.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 2.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○. ○○. 접수 제○○○호로써 20○○. ○○. ○. 매매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 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○○. ○○. ○. 소외 ◆◆◆에게 금 30,000,000원을 이자 월 2%, 변제기 20○○. ○○. ○○.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. 위 돈을 대여할 당시, 원고가 채권회수에 대한 우려를 하자 ◆◆◆은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

등기부등본을 보이면서 원고에게 만일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
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여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여도 아
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, 이를 증명하고자 위의 내용이 담긴 각서
및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권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해주었습니
다.

2. 한편, 피고는 ◆◆◆와 친분관계가 있는 바, ◆◆◆가 원고에게 위 각서 및 위
임장을 써줄 당시 입회를 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원고가
채권확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
3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○○. ○○. ○○. ◆◆◆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게
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법원 ○○등기
소(접수 제○○○호)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
4. 위에서 보듯이 ◆◆◆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별지목록 기
재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가장으로 처분한 사람이고, 피고는 소외인의 이러한
사정을 잘 알면서도 소외인과 공모하여 가장매매를 통하여 소외인의 별지목록
기재의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.
5.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이 공모하여 행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
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보전을 해하는 악의의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
할 것이며, 아울러 그로 인해 피고가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○.
○○. 접수 제○○○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
이므로, 원고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
게 되었습니다.

입 증 방 법

-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갑 제1호증 | 차용증 |
| 1. 갑 제2호증 | 각서 |
| 1. 갑 제3호증 | 위임장 |
| 1. 갑 제4호증 | 인감증명 |
| 1. 갑 제5호증의 1, 2 |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|
| 1. 갑 제6호증 | 토지대장등본 |
| 1. 갑 제7호증 | 건축물대장등본 |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입증방법 | 각 1통 |
| 1. 소장부분 | 1통 |
| 1. 송달료납부서 | 1통 |

20○○. ○. ○.

위 원고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[별 지]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〇〇〇아파트 제5동

[도로명주소]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

전유부분의 건물표시

건물의 번호 : 5 - 2- 205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

면 적 : 2층 205호 84.87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

대 9,355㎡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935500분의 7652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척기간	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는 날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(민법 제406조 제2항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	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비용	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·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.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법 제406조 제1항). ·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,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50985 판결). ·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,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(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3717 판결). ·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,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음(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1다14108 판결). 		

※ (1) 관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3.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「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」이라고 할 것이므로,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

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,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
없음(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2마1156 결정).

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
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
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
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
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
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
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
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
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